

독일 병정의 고지식함 : 선진국의 요건

아래 에피소드는 총무처의 중견공무원이 1980년대 후반 독일에서 연수받을 때의 경험을 쓴 것이다. 그는 이것을 철저하게 업무 수칙을 지키는 독일 공무원의 ‘융통성 없고 고지식한, 독일 병정’의 전형적인 예라고 감탄하면서 소개한 바 있다.

융통성 없는 ‘독일 병정’

“어느 날 밤 밖에서 돌아와 보니 내 방 열쇠가 없었다. 열쇠를 방에 두고 나온 것 같았다. 근무자는 마침 친하게 지내던 젊은 수위여서 사정을 말했다니 염려 말라며 마스터키를 가지고 열른 따라 나서 주었다. 내 방은 6층에 있었기에 승강기를 이용했었고, 자연스럽게 나는 승강기 쪽으로 걸어갔다. 다가가 버튼을 누르고 돌아다보니 그는 계단 앞에 서있는데 암만해도 승강기 쪽으로 오려는 기색이 아니었다. 걸어 올라가려고 그러는 건가 6층까지, 설마하고 물었더니, 아닌 게 아니라 자기는 계단으로 올라가겠으니 나 혼자 타고 올라가라는 것이었다. 정말 의아해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왜 그랬을까. 그는 왜 나와 함께 승강기를 타지 않고 따로 6층까지 걸어 올라가려고 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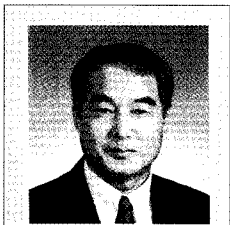
자, 그는 무어라고 대답했을까. 그는 대답했다. 그 대답의 의미를 파악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마침 문이 열려 한마디 대꾸도 못한 채 승강기를 탔다. 그의 대답은 상상 밖이었다.

승강기 속에서 그 의미를 완전히 알아 차렸을 때 나는 혼자 정말 깜짝 놀랐다. ‘나도 함께 승강기를 타고 올라 가다가 승강기가 고장이라도 난다면 그때 밖에서 조치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다.’ 승강기에서 내렸을 때 그도 벌써 다 올라오고 있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국정신문, 1994년 3월 21일, 총무처 나룻길 과장)”

대규모 정전 사태의 비극

블랙아웃 직전까지 다다라야 다급하게 취한 순환 정전 조치는 전국적으로 큰 혼란을 불러 왔다. 그리고 이어서 대통령의 진노, 장관과 전력거래소 이사장의 사임, 관련자들의 문책 등이 뒤따랐다. 언론도 문제의 원인과 과정 등을 따지면서 다그쳤고, 국민 모두가 사태 추이를 쫓쓰름하게 지켜보았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우리는 무언가 모르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위기 대응 체제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뛰어난 일본이 맥없이 당하는 상황에 우리는 괜찮을 것인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이번의 전력 소동은 우리의 허술한 비상사태 대처 역량을 여실히 드러내고 말았다.

순환 정전을 해야 할 상황이 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며 어떤 요소들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판단해야 되는지 분명히 규정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판단과 결정을 주도하



글 송하중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hahzoong@khu.ac.kr
글쓴이는 서울대학교 금속공학과 졸업 후 하버드대학교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NSF 초첨연구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한국정책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고 책임질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 일에서 전력거래소나 정부 당국자들은 상황전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막상 일이 닥쳐서도 따라야 할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아니, 이와 같은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적절한 절차를 갖추지 못했거나, 있다고 하여도 관련자들이 잘 알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이 터지고 난 뒤,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따지면서 드디어 전기요금 체제가 불합리하다거나, 요금이 너무 싸서 에너지 소비 행태를 왜곡해 왔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기도 한다. 그리고 계획된 스케줄에만 맞춰 발전소 정비에 들어간 한전의 공조 부족을 나무라기도 한다. 물론 물가 인상을 막기 위해 전기요금을 원가 이하로 억눌러 온 정책 당국의 책임이 없지 않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행정부에 끌려 다닌 국회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대규모 정전 사태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일 것이다. 사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큰 사건들은 어느 특정 분야의 문제라기보다, 우리 사회 전반의 성숙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이번 일은 우리가 이룩한 엄청난 외형상의 성취에 더하여, 진정한 선진국이 갖춰야 할 것에서 무엇이 부족한가를 잘 보여주었다. 국가 전체 차원에서 다양한 구성분자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거대 정책 역량이 형성되는 데에는 아쉽지만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시급한데 심각하게 결여된 것은 구체적 실천 단계의 섬세한 집행력이다.

진정한 선진국을 위한 소프트 파워

2년 전 우리는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공식 가입했다. 절대빈곤국이 반세기 만에 선진국 중에서도 원조공여국들만의 모임에 당당히 참여하게 된 것이다. OECD 회원국, 세계은행의 선진경제 분류, 1인당 GNP 2만 달러 돌파, 인간개발지수(HDI Index) 등에서 선진국 징표를 다져오다가, DAC 회원이 되면서 이제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멤버 위치를 확고히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형적 지표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 스스로가 아직 부족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다. 사회 운용의 기초를 형성하는 개인 및 조직 간의 상호 관계에 흐르는 신뢰, 질서

와 규칙 준수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DAC 회원이 되던 즈음 어느 언론인은 '개해업'과 결별하지는 글을 썼다. "우리 나라가 원조 공여국으로 올라선 비결의 상당 부분은 앞뒤를 가리지 않는 '개해업'이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 주먹구구, 얼렁뚱땅, 떼법, 아니면 말고 같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개해업의 유산을 이제는 정말 청산해야 한다. 약속과 규칙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중앙일보, 2009년 11월 27일, 노재현 논설위원)."

순환정전 사태의 앞뒤를 지켜보면서 20여 년 전 한 공무원의 독일 경험담과 2년 전에 공감했던 주장이 떠올라 다시 읽어 보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명실상부한 선진국의 위상은 경제적 번영만으로 이를 수 없다. 소프트 파워와 스마트 파워가 제대로 형성되어야 한다. 쉽게 가시화되지 않는 개인적 자유, 사회적 자본, 안전과 안보, 거버넌스, 교육, 건강 등이 수준에 다다를 때 진정한 선진국이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추구해야 할 것은 약속과 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지키는 것이다. 2,3 류의 개해업 잔재들을 털어내고 합리성에 입각한 룰을 만들어야 한다. 사회 모든 구성분자가 적절한 양보 하에 합의를 도출하여 지킬 수 있는 규칙을 설정해야 한다. 물론 이 과정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것들이 확립되고 작동되면 우리는 그 틀 안에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을 영위하게 된다.

합리적 사회 위한 과학기술계의 역할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제공하는 주역은 다름 아닌 과학기술계가 되어야 한다. 어느 다른 영역보다 과학기술 활동은 합리성을 기본 논리로 한다. 과학기술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사회가 고도화되면 거기에 근거한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이 다른 분야로 스며들게 된다. 이렇게 규칙을 지키는 사회, 예측 가능한 사회는 과학기술적 사고와 행태에서부터 출발돼야 한다. 융통성 없다고 핀잔을 들을지라도 '독일 병정'스러운 자세를 갖추고, 개해업의 잔재를 털어 내는 것을 과학기술이 선도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의 대규모 정전 사태를 통해, 우리 사회 업그레이드에 과학기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인지 다시 한 번 강조되기를 기대한다. **ST**